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양림 배재대학교

논문 요약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정권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순환적 변동의 과정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소위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정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성 문제를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과 평가의 투명성 측면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 중 가정배경 요인은 두 전형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배경 요인은 일반고와 중소도시·읍면지역은 학생부위주전형, 특목고·자사고와 대도시지역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첫째, 상위계층일수록 학종, 수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객관적인 기록과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대학 단위의 입학사정관 이외에 국가가 일정한 자격수준을 갖춘 ‘공공사정관’을 양성하여 함께 참여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공정성, 수능위주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등, 투명성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I. 서론

최근 대학입학전형제도(이하 대입전형제도)와 관련하여 화두(話頭)는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학입학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의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의 문제지 유출 사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학 관련 논란 등을 계기로 더욱 가열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교육부에서 2022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수능위주전형을 30%이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한 것도 이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 그런데 대입전형제도에서 공정성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대학의 입학정원이 입학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원의 희소성(객관적 조건)과 그에 따른 경쟁, 그리고 대입전형제도가 지원자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주관적 조건) 점에 기인한다(김회용 2011).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대입전형제도의 변천과정을 보아도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대입전형제도는 해방 직후 대학별고사제에서 시작하여 1969년 대학입학예비고사제로 대학입시체계 기틀을 마련한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강창동 2007).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정권의 교체라는 교육 외적인 환경 요인에 따른 것도 작용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대입전형제도를 개편·개혁하는 과정이었다고 볼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입전형제도가 등장할 때마다 전형제도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자본, 정보 등을 많이 가진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해 온 대입전형제도 개편안은 ‘시험점수 경쟁 완화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대학입학전형에서 수능성적의 반영 비율을 낮추는 대신 학생부 및 기타

1) 나아가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019년 11월 발표한 바 있다.

다양한 전형요소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 개혁 내용으로 보여 주고 있다(이수정 외 2014, 129). 그리고 이러한 개편안은 대입전형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어떠한 대입전형제도가 더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대입전형제도에서의 공정성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론과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또한 공정성을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경우도 많았다고 할 것이다²⁾. 또한 대입전형제도 자체의 변화 과정을 나열하는데 치중하거나, 정권의 교체라는 정치환경 요인에 종속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 왔다(안선희 2018a). 하지만 공정성이란 개념이 일반적 의미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공정성 개념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대입전형제도의 공정성 논의가 교육기회의 배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이돈희 1999) 논의의 범위도 또한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공정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의 바탕으로 Rawls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입전형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다음,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과 평가의 투명성 측면에서의 공정성의 문제를 검토한다. 특히 현행 대입전형제도 중에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교를 통해 공정성 문제를 분석한 후³⁾, 대입전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공정성을 기회의 균등만으로 한정할 경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치우침 없이 동등하게 적용하는 '형식적 공정성'(formal fairness)이 확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쟁이 발생하며 이 경우는 형식적 공정성의 확보만으로는 공정성이 충분하게 마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쟁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쟁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탈락자들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불만을 가지기 마련인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라는 도덕적 이유를 포함한 주관적 인식의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한 '실체적 공정성'(substantial fairness)이 필요한 것이다(Hooker, 2005: 331).

3) 논술위주전형, 실기/실적전형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Rawls의 공정성 이론

‘공정성’(公正性, fairness)을 분석적 의미는 ‘공평하고(公) 올바른(正) 성질’이다⁴⁾. 여기에서 ‘공평’이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그리고 ‘올바름’은 ‘말이나 생각, 태도, 행동 등이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는 옳고 바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공평은 분배에 있어서의 공평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적어도 형식상(formally) 분배에 있어서의 공평을 관철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은 분배의 올바른 방법(정의)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공정성은 정의의 핵심적 요소이며 척도이자 기준(정경환 2013)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이다. 즉, 공정성이 없으면 정의는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성은 정의의 제1 덕목이 된다는⁵⁾ 점에서 공정성과 정의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에 관련한 현대적 이론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Rawls (1958)의 이론을 들 수 있다⁶⁾. Rawls는 당사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절차를 구상, 그로부터 합의를 도출하여 계약론적 토대 위에 정의론을 세우고자 하였는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⁷⁾. 제1원리는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4) 공정성에 대한 미시적 또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공평’은 분배적 공정성을 뜻하며, ‘올바름’은 절차적 공정성을 의미한다(김희용, 2011).

5) 이는 Rawls(1971)가 ‘사상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라는 언명과 상통한다.

6) Rawls는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Nozic(1974)의 견해와 동일하다.

7) 이러한 Rawls의 정의론은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양 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이다(이종수 외 2016, 110).

제2원리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차등 원리(difference principle)’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리’이다. 그리고 제2원리가 상충할 경우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황경식 1988). 즉, 기회균등이 전제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수혜자에 대한 차등의 원리가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성에는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결과의 공정성과 분배 과정에 있어서의 올바른 원칙을 적용하는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여기서 결과의 공정성이란 투입한 노력에 비해 그로부터 받는 보상의 비율이 자신의 타인의 그것에 비하여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Cropanzano, et al. 2002, 325). 그런데 이러한 배분은 개인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개인의 동기를 위축시켜 사회의 활력과 생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강태중 2018)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절차의 공정성이란 보상의 총량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박철민 외 2004, 128) 의미한다. 이는 균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기회 균등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희소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보장한다는(박기범 외 2011) 것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결과의 분배적 정의는 과정의 절차적 정의가 확보됨에 따라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강태중 2018)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 공정성은 분배 결과보다는 분배 과정의 공정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2) 대입전형제도와 공정성

현재 우리나라의 대입전형 방식은 크게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에 따라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대교협 2018). 그리고 학

생부위주전형이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 그리고 대학의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학교추천서, 면접평가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전형)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전형 기준에 따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은 전형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경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타당성·신뢰성이라는 내적 원칙과 공정성·공공성이라는 외적 원칙을 고려하여 전형대상, 지원자격, 전형기준,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도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대교협 보도자료, 2018.),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추진, 대학입학전형의 간소화⁸⁾,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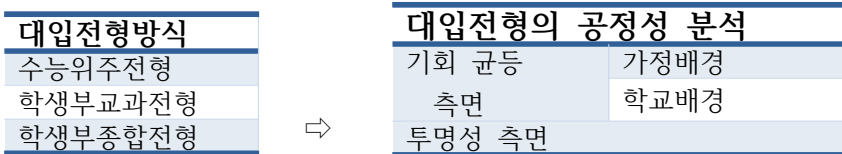
그런데 Rawls가 주장한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대학입학전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치르게 되는 전형인 수능위주전형이 타당해 보인다. 대입전형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도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제1원칙이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수능이 국가 또는 교육청,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제1원칙만으로 대입전형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8) 이를 위해 모집시기(수시·정시)별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도록 하며, 세부적으로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할 것을 권고하며,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방법 수도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최대 6개 이내로 제한(정원 내 전형 기준)하도록 하였다.

Rawls의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제1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2원칙인 기회 균등과 차등의 원칙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공정성은 대입전형의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입전형제도의 공정성은 지원자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방식, 즉 평가자의 주관성이나 선호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가가 가능한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대입전형자료가 ‘정량적 자료’든 ‘정성적 자료’든 간에, 그러한 전형자료를 가지고 정해진 입학정원을 선발하는 데는 상대적 서열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이수정 2018). 따라서 대입전형제도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란 공정한 기회균등과 투명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1> 대입전형방식에 따른 공정성 분석



2. 선행연구 검토

대입전형제도의 공정성 관련한 선행연구 연구는 연구의 대부분이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이고, 그 대상도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주로 고교교사나 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이었다. 그리고 학종전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수능위주전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수능위주전형은 국가가 주도하는 고사에 의한 전형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가

9)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해 차등의 원칙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전형’의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의를 보류한다.

상대적으로 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먼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종전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공자원, 박은아와 이지연(2018)의 연구에서는 학종전형의 학생선발(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믿음이 가는지에 대해서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정은(2012)은 고교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과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생활기록은 정성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바 각 항목의 기재내용에 대해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를 대학에서 학생 선발 등의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내용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구가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윤소정, 전보라와 김희용(2015)은 31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이 인식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종전형은 면접평가에 있어서의 편차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회피나 제척 제도나 운영 기관의 분리에 대한 문제, 평가자별 평가 성향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⁰⁾. 그리고 학종 전형에서 학생 선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의 선발, 교육, 감독에 있어서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평가 준거의 객관화, 타당화,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강인구(2012)의 연구나 입학사정관의 역할에 기초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각 대학별 자격을 연수한 후에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한 손희권, 주휘정(2009)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정(2018)은 학종전형이 공정성과 신뢰성, 타당성이라는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학종전형의

10) 이 연구에 따르면 공정함이란 목적에 타당한 평가를 의미하며, 입학사정관제에서의 공정함은 각 학교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인재상이 기준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지원자가 자기가 원하는 전형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별·전공별로 다양한 전형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수능위주전형과 관련하여 김신영(2009)은 수능은 교육의 외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해 왔지만,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고 변별력 있는 검사도구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다른 전형자료들도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떨어지고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변별력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출제 전략을 개발하고 탐색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진구 외(2014)는 다른 전형요소보다 수능이 대입 선발에 있어 필요한, 공정성과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대입전형자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능이 지향해야 할 성격 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수능은 그 역할에 충실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입전형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쉬운 수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형요소별 비교를 통한 공정성 연구로 김희용(2011)은 ‘분배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으로 나누어, 대입전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제도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실제적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기수, 박소영(2017)과 강기수, 조규판(2017)은 공정한 대입전형의 정착을 위하여 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를 체계적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대학은 이러한 자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생부를 전형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원규(2011)는 현재의 대입전형제도는 공정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교육적 목적의 달성에도 실패한 채 학생의 사회적인 분류라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학은 입학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여 비중을 낮추는 반면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는

입학사정 등 새로운 대입전형제도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평원(2018a)은 대입전형에 대한 분석이 다양성과 공정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대입전형제도와 연계하여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입전형제도가 공정한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수능전형에 대해서는 단순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입장과 획일화되어 불공정하다는 입장, 학종전형에 대해서는 다양해서 공정하다는 입장과 복잡해서 불공정하다는 입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평원(2018b)은 전국의 고교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능전형에 대해서는 공정하다고, 학종전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인식이 다양성의 기준으로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입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실태 또는 인식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요소별로 보면 대체로 수능위주전형이 학종전형보다 더 공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전형이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능위주전형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준적이고 단일한 기준으로 전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부위주전형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Ⅲ. 대입전형제도의 공정성 분석

1.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대입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학력(學歷)을 위한 학력(學力) 경쟁(강창동 2007, 84)이 난무하는 학력주의(學歷主義)가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는 본질적으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매우 복잡하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투쟁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학별 본고사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무자격자 입학 등 부정 입학 문제, 일류대에 지원자가 집중하는 현상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모든 지원자를 ‘일괄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입 자격을 결정하는 도구로 국가수준의 표준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1969학년도에 ‘대학입학예비고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됐던 초기에는 말 그대로 예비고사의 기능에 그쳤고 대입 당락은 여전히 예비고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본고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그런데 1973년부터는 예비고사 성적을 최종 당락 결정에 반영하게 되고, 심지어 본고사 없이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전형을 매듭짓는 대학들이 증가하면서, 전형자료로서 대학입학예비고사 성적의 위세는 더욱 강해져 갔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불공정 문제에 대응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전형자료로 인정받게 되는 ‘개혁’(강태중, 2018)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결국 이후 대입제도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시발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곧 공정한 것이고,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 전두환정부는 본고사 폐지, 과외금지, 졸업정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7·30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 예비고사가 대입전형자료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당시의 공정성 문제는 ‘내신’에 관련하여 크게 제기되었다. 즉, 각 고등학교는 내신 ‘절대평가’ 제도를 이용하여 평가 문항을 쉽게 출제하는 등의 내신 부풀리기의 편법이 성행하였고, 또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표준이 모든 학교들 사이에 똑같을 수가 없다는 비판이 확산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이르러 대입전형은 국가의 ‘대학수학능력시험(1994년),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1995년)’, 대학의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 실

기 등) 등 세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특히 김영삼정부의 1995년 대입전형요소의 다양화, 대입자율화를 기반으로 하는 5·31교육개혁, 김대중정부의 1998년 10월 19일에 ‘새 학교문화 창조’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돈희 외 1998)’, 노무현정부의 고등학교 학생부 내신(교과)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2008학년도이후 대입제도 개선안(교육인적자원부 2004)’을 통해 부분적인 변천이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내신평가는 절대평가에 따른 부풀리기가 심각하였고, 그에 따라 정부 정책 방침과는 달리 대학입학전형에서 고교 내신 성적의 변별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들은 형식적으로 고등학교의 내신을 대입에 반영하였으나,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대입전형에서 수능이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더욱이 학생들은 고등학교의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미흡한 결과, 대입을 위해 고교 내신성적의 향상보다는 합격 결정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 하여 수능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수능대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결과를 가져와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후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을 내세워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였고,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통해 여러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어 박근혜정부도 ‘고교 교육 정상화 실현’을 비전으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교육부 2013)”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입전형 간소화’를 핵심으로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시행 계획(교육부 2013)’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 유형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입학사정관전형이었던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속적인 확대라고 할 수 있다¹¹⁾.

그리고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교육부는 숙의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공

론화를 거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교육부 2018)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은 그 절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형식을 취했으나, 개편방향을 두고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로, 다시 시민참여단으로 이어지는 동안 교육부의 책임전가, 미래지향성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여주었다는(이상명 2018) 비판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학생부위주전형을 확대하던 기조에서 갑자기 수능 위주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 나름대로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변천과정은 교육적 관점보다는 대입전형제도의 공정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정권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대입전형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이상적인 교육제도의 방향을 따라서 순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변화라기보다는,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입전형 제도의 순환적 변천은 어떠한 대입 제도가 우리 사회의 교육 이상에 적합한 제도이며 우리 자녀들의 좋은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타당한 제도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반영하고 있다(김동석 2001).

2. 기회균등 측면에서의 공정성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학생들의 참여 기회에 있어서의 균등을 의미한다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

-
- 11) 이에 대해 정권교체에 뒤따르는 대입정책의 변화과정은, 대입정책이 교육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닌 정치집단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변화되어 왔다는 주장(노명순, 2006: 안선희, 2018a)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변화의 기저에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31조 ①항) 이는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과 무관한 출신 지역이나 부모의 재산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는 당연히 능력에 따른 균등한 배분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입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배분의 규칙인 능력에 대한 정의가 천차만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주체들 간에 서로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강태중 2019)¹²⁾. 이러한 능력이 학생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Rawls가 주장한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이라는 제1원칙으로만 배분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1) 가정배경과 공정성

우리나라의 대입전형제도는 가정배경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으며(손희권 외 2009; 안선희 2018a)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가정의 경제자본을 매개하는 사교육비, 교육지원 활동 등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상위범주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대입전형의 결과 대체로 가구소득의 백분위가 높은 상위계층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정시 일반전형의 비율이 전체입학전형 가운데

12) 그런데 2015학년도에 시행된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3.21점) > 수능 위주 전형(3.16점) > 학생부 종합 전형(2.47점) 순으로, 학부모의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전형(2.93점) > 학생부 교과 전형(2.92점) > 학생부 종합 전형(2.76점) 순으로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수능 위주 전형(2.93점) > 학생부 교과 전형(2.87점) > 학생부 종합 전형(2.77점) 순으로 계층 간 불평등 해소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수진, 2015: 94-96). 이처럼 안수진(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전형이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데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반면, 가구소득 백분위가 높을수록 각 집단 내에서 입학사정관전형에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자료에 따르면 부의 교육 수준, 직업, 소득계층 등에 따라 수능서열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부의 교육이 높을수록, 직업이 관리 전문직 등일수록, 소득계층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수능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강병운(2001)이 수능위주전형은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력과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계층 또는 학교, 지역의 자녀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같다.

한편,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교육지원 활동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회계층이 높은 학부모들은 그들의 가용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입시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다양화된 대입전형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입시 성공가능성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황여정 외 2012). 정건희 외(2010)도 수시전형에서 평가요소의 중요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 부문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생들이 부모이 지원 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에 따르면 학력, 소득수준, 직업지위 등이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쏟은 데서 비롯된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황여정 외 2012).

이러한 점은 가정배경과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이든 학생부위주전형이든 사교육비가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며,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평등이 중요한 것이지 대학입학전형제도 자체가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대입전형으로 학생부교과전형(27.3), 수능위주전형(26.7), 학생부 종합전

형(19.1) 순으로 나타난 안수진(2015)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이는 사교육 또는 그 의존도의 감소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학교배경과 공정성

먼저 학교배경과 관련하여 대학 합격자의 구성은 고교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표 1>에서 보듯이 일반고의 경우는 학종과 수능전형으로 합격한 비중이 비슷한 반면, 자사고는 수능(48.2)의 비중이 높고, 외고·국제고(50.6%), 과학·영재고(62.8)는 학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신경쟁이 치열한 자사고 학생들은 수능성적의 반영 비중이 높은 정시전형을 선호하는 반면, 외고 등과 같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은 수시전형에서 특기자전형이나 동일계열 우선선발 전형을 활용하여 입학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13개 대학의 각 출신고교 합격자의 전형별 비중(2016~2019)

고교 \ 전형	학종	학생부 교과	수능	논술	특기자	전체
일반고	39.1%	8.9%	32.1%	16.0%	3.9%	100%
자사고	30.9%	0.4%	48.2%	16.3%	4.1%	100%
외고·국제고	50.6%	0.0%	27.1%	8.2%	14.1%	100%
과고·영재고	62.8%	0.0%	2.3%	5.7%	29.2%	100%

출처: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9.11.09.: 21-23).

그런데 이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과학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은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사고와 외국어고와 같은 특목고 학생들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정광희 외(2009)의 결과와 상이한 것이다¹³⁾. 이는 강기수(2016)도 일반고는 학생부위주전형의 합격률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수능위주전형 합격률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학종전형이 정착되기 시작한 초기에 조사 결과이거나(정광희 외 2009) 조사대상의 상이성에서(강기수 2016)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입전형제도가 자사고나 외고 등 특목고에 특별히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학교유형별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자사고나 외고 등 특목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여건이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의 13개 대학의 4년간 합격자의 고교 소재지별 조사에 따르면

<표 2> 13개 대학의 고교소재지별 합격자 비중(2015~2018)

지역 전형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비중
학생부종합	27.4%	22.0%	35.7%	15.0%	100%
학생부교과	21.9%	20.8%	46.5%	10.9%	100%
수능	37.8%	15.7%	37.9%	8.6%	100%

출처: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9.11.09.: 25-26).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특별시는 수능위주전형이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광역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서울지역의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학생부위주전형보다는 수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기타 지역보다 유리한 사교육을 통한 수능 준비에 치중했음을 보여준

13) 정광희 외(2009)에 따르면 특목고 출신 집단에서 정시 일반전형 70.6%, 수시 일반전형 26.5%, 입학사정관전형 2.9%, 일반계고 출신 집단에서는 정시 일반전형 55.1%, 수시 일반전형 35.9%, 입학사정관전형 9.0%로, 특목고 출신 학생의 정시 일반전형 강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정광희 외, 2009).

다¹⁴⁾.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정광희 외(2009)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학생부의 교과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수능의 비중이 높은 정시 전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와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정광희 외(2009)의 연구의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정시의 수능위주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이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입학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읍면지역 및 특수지역은 수시의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이 더 높았다. 아울러 다른 집단에 비해 읍면지역 및 특수지역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¹⁵⁾.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재지에 따른 대입 전형제도는 대도시의 경우는 수능, 기타 지역은 학생부 전형이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3. 투명성 측면에서의 공정성

대입전형요소와 관련하여 평가의 투명성 측면에서의 공정성은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김평원(2018a)은 신뢰도를 중시하여 수능위주전형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대입제도를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수능성적은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시간에 치르는 시험을 통해 얻은 점수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종전형은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준비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강조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

14) 이는 수능결과 대도시 지역이 표준점수 평균이나 1·2등급 비율이 대도시 지역이 높았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보도자료, 2010.12.05.)의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 구체적으로 특별시 소재 고교를 졸업한 집단에서 정시 일반전형 63.7%, 수시 일반전형 31.2%, 입학사정관전형 5.1%, 광역시 소재의 고교를 졸업한 집단은 정시 일반전형 51.2%, 수시 일반전형 39.9%, 입학사정관전형 8.9%, 중소도시 소재 고교를 졸업한 집단에서는 정시 일반전형 58.0%, 수시 일반전형 33.2%, 입학사정관전형 8.8%, 읍면 지역 및 특수 지역 소재 고교를 졸업한 집단은 정시 일반전형 31.4%, 수시 일반전형 48.5%, 입학사정관전형 20.1%로 나타났다.

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다고 보는 반면에, 학생 간 정보의 격차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신조어에서 나타나듯이 불공정한 제도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시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이 작용한다.

그런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8)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서 수시모집 비율은 77.3%인 반면 정시모집 비율은 22.7%로 수시모집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형 유형별로는 수능위주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19.9%(6만9291명)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반면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67.1%(233,230명)를 선발하여 전체의 3분의2를 초과하였다. 그런데 학생부위주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42.4%(14만7345명)이었다¹⁶⁾. 그리고,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 비율은 25.1%(1만2895명)에서 27.5%(1만4261명)로 높아졌지만, 이들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도 43.6%(2만2436명)에서 43.7%(2만2700명)로 역시 더 증가했다¹⁷⁾. 이는 지방 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강하며, 서울의 경우 수능위주전형이나 학종전형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수능위주전형의 투명성

수능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의 성격과 의미 중의 하나로 개별 교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을 들고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04). 그리고 수능평가방식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

16) 이는 2019년도에 비해 학생부위주전형의 선발비율이 전년도보다 1.2%p 증가한 것이고, 인원으로는 수능위주전형이 3000여 명 줄고 학생부교과전형이 3000여 명 늘어난 것이었다.

17) 이들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은 2019학년도는 7.4%(3,800명), 2020학년도는 7.0%(3,641명)에 불과하다.

신위원회에서 수능 5등급제를 주장했으나 2008년 9등급제 실시로 확정되었고, 2009년부터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점수를 모두 표기하도록 변경되었다(김신영 2009). 이에 대해서 진보적 시민 단체와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수능 등급제(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3). 특히 대입에서 수능의 비중이 과도하여 교육과정이 수능에 종속된다는 점,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점수를 많이 요구하며, 점수 경쟁으로 불필요한 사교육 유발, 우수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됨(안현호 2013), 수능시험의 타당성보다는 객관성, 변별력이 우선시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 수능에서 영어와 한국사의 평가방식이 등급제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통해서 영어교육 정상화와 영어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이병민 2014), 풍선효과처럼 변별을 위해 다른 교과목이 어려워지고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학과 일부 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대학이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수능위주전형이 투명성과 신뢰성의 면에서는 다른 전형보다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공교육의 정상화나 사교육비 감소 등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 학생부위주전형의 투명성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부교과전형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도입된 고교내신 9등급제는 성적 부풀리기를 해소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 간의 과열 경쟁 풍토가 조성되었다는(지은림 2011)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지만(교육부 2011), 현실적으로는 성적 부풀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변별력이 약화되어 대입에 반영하기 어렵고, 특목고·자사고 출신자들에 대한 우대와 일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김순남 외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전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명하게(객관적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과과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학종전형과 관련하여 투명성의 문제가 되는 것은 ‘깜깜이 전형’의 논란이다. 그리고 이는 학종전형이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제도 문제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대학은 합격과 불합격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생부를 결국 정량적으로 전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 정성적인 기록을 이 정량평가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현장에 공개해야 학종전형의 공정성 논란은 최소화될 것이다. 따라서 상대평가의 등급을 완화하여 과열 경쟁을 해소하고 성취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감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교육청 단위의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09/04). 또한 학생부 기록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보다 교사의 학생부 기록 부담을 줄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적 평가의 항목과 내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기재방식이나 양식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IV. 결론

우리나라의 대입전형제도는 정권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순환적 변동의 과정을 겪었지만, 항상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Rawls는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기회균등의 원칙이 대입전형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입학전형제도 특히 학종전형과 관련하여 소위 ‘금수저전형’, ‘깜깜이 전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수능위주전형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분석의 결과 기회균등 측면 중 가정배경요인은 두 전형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배경요인은 일반고와 중소도시·읍면지역은 학생부위주전형, 특목고·자사고와 대도시지역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진학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의 측면에서는 학종전형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했다.

첫째, 어느 대입전형제도가 단정적으로 더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상위계층일수록 학종, 수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종파는 수시, 수능파는 정시'라는 단순한 주장이나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시전형에서도 학생부와 수능 최저기준을, 정시에서도 학생부의 최저기준을 함께 활용하는 전형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들의 학생부와 수능을 동시에 준비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학생부위주전형, 특히 학종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객관적인 기록과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학생부위주전형이 교사의 학생부 기록을 토대로 입학사정관이 학생부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기인한다. 하지만 교사의 학생부 자료를 간소화하면서도, 평가요소를 정량평가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단위의 입학사정관 이외에 국가가 일정한 자격수준을 갖춘 '공공사정관'을 양성하여 함께 참여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수·박소영. 2017.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분석.”『인문사회과학연구』. 18(3), 49-76.
- 강기수·조규판. 2017. “대입전형유형별 입학생 특성 분석.”『한국교육학 연구』. 23(3), 143-164.
- 강창동. 2007.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교육문제연구』. 28(28), 83-113.
- 강태중. 2018. “‘공정한’ 대입제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재고(再考).” 『이슈페이퍼』. CP 2018-18, 1-46
- 김신영.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 22(1), 1-27.
- 김평원. 2018a.『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 (3-16). 교육부(정책자문위원회)』.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4차 대 입정책포럼 자료집.
- 김평원. 2018b. “대입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24(3), 105-126.
- 김희용. 2011.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교육사상연구』. 25(1), 21-50.
- 백병부·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손희권·주휘정. 2009. “신문이 제시한 대학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34, 1-24.
- 안선희. 2018a. “정권교체와 대학입시 정책변동.”『한국교육정치학회』. 105-156.
- 안선희. 2018b.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의 추진과정과 정책문제 분석.” 『교육문화연구』. 24(6), 87~116.

- 윤소정 외. 2015. “국내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실태와 확보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7(1), 74-82.
- 이돈희. 1999. 『교육정의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상명. 2018.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법과정책연구』. 18(4), 29-51.
- 이수정. 2018.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개혁에 대한 쟁점 분석: ‘학생부 종합전형’ 도입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4), 923-944.
- 정경환. 2013. 『인권과 정의』. 서울: 이경출판사.
- 정광희 외. 200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 전형 연구VI. 한국고교생의 대학 준비 과정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정원규. 2011. “교육의 본래 목적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본 대학입시의 문제.” 『사회와 철학』. 21, 107-140.
- 황여정·김경근. 2012.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성 영향요인 및 그 계층적 함의.” 『한국교육학연구』. 18(3), 183-211.
- Cropanzano, R., Prehar, A. & Chen, P.. 2002. *Using social Exchange Theory to Distinguish Procedural From Interactional Justice*.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27(3): 324-351.
- Hooker, B.. 2005. “Fairness.” *Ethical Theory & Moral Practice*. Vol. 8 Issue 4, 329-352.
- Rawls, J.. 1988.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황경식 역). 서울: 서광사. (원전은 1958년에 출간)

투고일 : 2020년 3월 14일 . 심사일 : 2020년 3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24일

* 양림은 광운대학교 행정학 박사로서 현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경감정책의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선행교육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등 주로 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Fairness of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Yang Rim
(Pai Cha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irness of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have been changed circularly with the turnover of political power, but the problem of fairness is not resolved. Recently, the various accidents triggered the problem of fairness with regard to the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and scholastic ability test admission type.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in the equal opportunity are 1) any admission systems advantageous relation to high socioeconomic status, 2) high school location and class has an effect on equal opportunity. And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is somewhat problematic in transparency of assessment. Such analysis suggests that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are requisite to various admission types and transparency of the high school report admission type must be necessary strengthe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bjective 'public admission officer' who take charge in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Keywords : fairness, high school report admission type,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scholastic ability test admission type, equal opportunity, transparency.